

野 “핵 확장 억제·반도체 무소득… 밀지는 장사 했다”

한미정상회담 여야 반응…국힘 “핵협의 그룹 창설 의의 크다”

민주 “한국 독자 핵 개발 차단”…정의 “尹, 도·감청 약속 못받고 비굴”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민들의 북핵 불안 해소를 수 있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빈수레 외교’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핵협의 그룹(NCG) 창설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는 확장억제 관련 정례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 신설,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도입 계획 등이 담겼다.

김 대표는 “(정상회담이) 안보 강화 차원과 별개로 우리나라 안정적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로 맺은 동맹으로 시작해 첨단 기술, 문화, 정보 수집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종전 선언에만 집착해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태복관으로 북한 눈치 보기에 비뚤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루는 시간만 벌게 해줬다는 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김정은에게 사기당해 비핵화 부도수표를 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

증 잘못 썼다가 집문서 날렸던 것이나 다름없다”며 “두고두고 국민들 앞에서 사과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는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맹비난을 쏟아부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며 깎아내렸고, 핵심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에서 소득이 없었다며 난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의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며 “단순한 국민 방면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선언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혹평했다.

IRA·반도체법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내놨다”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꼬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에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이 한국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게 아닐까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한국의 독자 핵 개발론을 차단하고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이 미국의 단독 권한임을 재확인한 합의”라며 “역대 진보·보수 정부가 추진해 온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날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준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그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고개나 끄덕인 셈”이라고 혹평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교협상 할 때마다 우리가 과연 주권국인지 모르겠다는 모멸감을 느끼는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다”면서 “사과는커녕 NBC 앵커가 (인터뷰에서) ‘친구가 친구를 엿따먹냐’고 지적하는데 윤 대통령은 비굴하게 짝이 없는 답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권국의 위신을 내팽개친 대통령 모습에 국민들은 모멸감을 느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野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국민의힘, 반대 토론 뒤 퇴장

‘정의당 안’ 연말 본회의서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무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었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종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직회부’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범죄 행위 의사 퇴출’ 의료법도…與, 거부권 건의 방침

의료인 내부 지역 간 점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회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하며 울먹였으며, 토론 후 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

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특별당규는 현역 기득권 지키기”

원의 인사들 “변화 바람 반영 안돼” 개정 중단 요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물을 담은 특별당규에 대해 ‘현역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의 인사들은 27일 “현역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개혁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4월 총선 공천에 적용할 특별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3~4일 당원투표, 중앙위원회 의결

을 거쳐 8일 최종 확정된다.

TF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적합도 조사 결과, 2위 후보자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순추천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원의 인사들은 “현실적으로 정치신인인 청년 정치인이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매우 어렵다”며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역 의원들이 이 제도가 청년을 위한 제도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선 후보자의 경선 불복·탈당·징계 전격 등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열람이 허용되는 반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공개되지 않는다”며 “당원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오광록 기자 cki@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